

## 歴史的 觀點에서 본 韓國經濟의 危機 解釋\*

李 炳 天\*\*

**논문초록** 한국경제의 위기는 국가의 과잉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인 과소규제 또는 탈규제, 즉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와 그것에 편승한 김영삼 정부의 무모한 금융 자유화의 악조합에서 야기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구발전국가 체제는 심각한 구조적, 제도적 왜곡이라는 부정적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리하여 국가주의 구체제의 유산 위에 시장주의 신체제의 모순이 중첩된 무책임 정치경제체제가 위기의 모태가 되었다. 위기는 '비민주적 통치방식에 내려진 징벌'이었다. 또한 한국의 발전 국가는 개발연대를 주도한 '강한 국가'였지만, 동시에 미국 헤게모니의 경계 안에 있는 약한 '반주권국가'였다. 미국이 냉전시대 한국경제 발전을 지원하던 발전안보주의 전략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하자 한국의 국가권력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것에 순응하는 연성 시장국가로 추락했다. 냉전시대 동아시아는 수평적인 지역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미국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발전안보연합의 틀이 구축되었는데, 이 냉전체제의 유산이 위기 발발과 그 수습방식까지 지배했다.

**핵심주제어:** 연성 시장국가, 무책임 정치경제체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O2

\* 이 글은 한국경제학회 제 8 차 국제학술대회(1998년 8월 18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 때 논평을 해주신 서한석 교수(경원대)와 별도로 심사를 해주신 익명의 두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이 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평자들은 전혀 책임이 없다.

\*\*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교수

## I. 머리말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서 여러 진단과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시작 단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접근방법의 측면에서나 구체적 실증의 깊이의 측면에서나 연구과제가 산적해 있다. 위기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국을 비롯하여 동아시아 경제위기가 갖는 이념적, 정치적 함축이 대단히 큰 만큼, 위기론 또한 '동아시아 기적'론 못지 않게 중요한 '해석 투쟁'의 장이 되었다. 세계적 논의를 보면, 기적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기론의 기본 대립축은 여전히 시장 대 국가다. 그간 줄기차게 한국의 기적은 시장 때문이고, 세계시장에 순응한 때문이며, 결국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은 덕분이라고 주장해 온 워싱턴은, 이번에는 돌변하여 위기는 과도한 국가규제와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 그리하여 시장규율의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위기는 시장규율의 부족에 내려진 징벌과 같은 것이다.

다른 한편 한국과 '동아시아 기적'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해 온 '수정주의' 그룹의 사람들은 국가 = 악, 시장 = 선의 이분법에 입각한 주류 신자유주의적 해석,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항하여, 위기는 국가의 과잉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인 과소규제와 탈규제, 무엇보다 금융 자유화와 개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 세계화와 그것에 편승한 한국의 무모한 금융 자유화의 악조합이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았다.<sup>1)</sup> 필자는 이 수정주의 견해가 위기의 실제 해명에 다가갔고, 신자유주의적 해석이 호도하고 있는 자기조절적 시장의 환상과 금융시장의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IMF-미국-초국적자본 복합체의 패권주의적 성격을 잘 비판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수정주의'적 해석도 결함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 견해는 국가관리 발전 자본주의의 부정적인 역사적 유산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발전국가 모델은 압축성장에 성공하여 그 성공의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모델로 이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구발전모델은 심각한 구조와 제도 왜곡의 부정적 유산을 물려주었고, 이는 밑으로부터의 대개혁을 요청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권과 재벌 연합의 강고한 힘에 눌려온 약한 시민사회

1) Wade, Amsden, Stiglitz 등을 비롯한 대표적인 수정주의적 견해는, 이병천·백영현(1998)에 번역 수록되어 있다.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2(1998) 수록 논문들도 함께 참조하라.

와 노동의 역량 때문에, 이행은 구체제의 부정적 유산에 시장주의가 중첩된 무책임 체제를 탄생시켰다. 즉 이전의 발전주의 규율을 상실한 국가주의 구체제의 유산 위에 시장주의 신체제의 모순이 중첩 결합된 무책임 정치경제체제가 위기의 모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역사의 무게는 국내적 측면에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발전 국가는 분명 대내외적 자율성을 가진 '강한 국가'였지만, 그것은 미국 헤게모니의 경제와 그물망 속에서 활동하였으며,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는 '약한 국가', '반주권국가'였다. 미국 헤게모니 반경 내에서 움직이는 이러한 약한, 반주권국가적 성격 때문에, 미국이 냉전시대 한국경제 발전을 지원하던 발전안보주의 전략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하자 한국의 국가권력은 그것에 부응, 순응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연성 시장국가로 전환했다. 그리고 냉전시대 동아시아는 수평적인 지역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미국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미국 일방주의적인 발전안보연합의 틀이 구축되었는데, 이러한 냉전체제의 유산이 위기발발과 수습방식을 지배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위기에 대한 시장 대 국가의 대립축에서 수정주의 해석을 옹호하면서도, 한국경제 위기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의 깊이를, 시장-국가 이항 대립축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이 대립축이 한국경제 발전의 국내외적인, 역사적 유산, 말하지만 그 '중장기 지속'의 유산과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를 밝혀보려고 하는 것이다.<sup>2)</sup> 제Ⅱ절에서는 권위주의 발전국가 체제의 역사적 유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Ⅲ절은 한국 국가의 성격이 재벌의 포로가 된 무능하고 부패한, 그 리하여 연성화된 시장국가로 전략한 것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Ⅳ절에서는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으로 전환한 미국의 금융개방 외압과 이에 순응, 편승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노선으로 금융-외환 위기가 빚어진 양상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Ⅴ절에서는 무책임 재벌지배체제와 고부채-과잉투자의 위기를 초래한 사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한국경제 위기에 대해 어떤 단일의 옳은 접근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이 주제가 가지는 복잡성을 강조하고자 하며, 브로델(F. Braudel)이 말한, 시간의 복수의 층위들에 따라 위기에 대한 다면적인 접근이 가능함을 옹호하려고 한다.

## II. 권위주의 발전국가 체제의 유산

자본주의적 발전국가 모델로 불리는 지난날의 한국형 발전모델의 핵심적 제도형태는 국가-기업-은행의 협력체제였다. 이것은 국가의 선별적 산업정책과 정책금융을 통한 투자유도와 재벌의 확장주의적 다각경영, 그리고 가계의 고저축-기업의 고부채-은행의 고채권이라는 금융구조 등을 기본 구성요소로 하였다. 발전국가는 압축 추격을 위해 재벌을 일종의 '대표 선수'로 선발하여 대대적인 산업금융을 지원하는 유인을 제공하였고,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대가로 수출목표를 비롯한 경제실적을 요구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역사상 국가 개입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를 국가 보호가 시장규율을 능가하는 규율기제를 창출하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코르나이가 사회주의 경제의 기업이 연성예산계약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였다. 그리고 여러 제3 세계 민족주의적 산업화 노력이 실패한 중요한 이유의 하나도 국가에 의한 규율의 부과 없는 지원과 보호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한국 발전국가 모델 성공의 핵심 요인은 국가의 재벌에 대한 지원이 지원과 지대 추구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실적의무를 결합시킨 지원-실적의 교환원리였다는 이해가 가능하다.<sup>3)</sup>

또한 한국의 금융제도와 기업의 금융구조는 영미형의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아니라, 은행 차입 중심 모델이다. 한국의 가계는 저축을 대부분 위험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 예금을 했고, 은행은 이들 자금을 기업에 대출하였다. 한국 재벌이 짧은 기간에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는 산업을 갖는 데는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주식 발행이나 내부 이윤만으로는 불가능했고, 은행 차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금융통제는 재벌을 생산적 산업투자로 유도할 수 있게 했으며, 재벌은 이 국가적 지원에 의한 '금융 약정'(financial commitment)에 힘입어서 장기적 고려를 가지고 성장지향적 고투자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발전국가는 수출지향 전략을 취하면서도 자본과 외환의 유출입을 엄격히 규제하였다. 한국의 산업화 성공은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통해 후발성의

3) 대표적인 연구로는 Amsden(1989)이 있다. 그렇지만 그의 규율 접근은 유인문제를 산업정책 및 복선형 산업화 양식과 유기적으로 연계시키지 않은, 단순 규율 접근이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는 이병천(1998, pp. 59~60) 참조.

이익을 잘 향유한 데 기인한 바 크지만, 이것은 무분별한 개방정책이 아니라, 선진 국가와 외국자본의 주변화 압력을 적절히 통제하고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를 규제한, 발전국가의 전략적, 선별적 통합정책에 의해 이루어졌다. 한국 발전국가 모델은 고 외채 모델이지만, 외국인 투자와 금융자본의 진출을 적절히 제한했으며, 외환 집중 관리를 통해 국내자본의 해외도피를 엄격히 규제했던 것이다. 수입개방도 산업정책 과 수출확대정책과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졌다. 시장주의적 접근은 한국경제가 개방 화됨으로써 성공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세계시장 수출과 대내외적인 자본통제의 결합이야말로 한국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지원과 실적을 교환하는 정부와 재벌 간의 규율제도와 선별적 개방정책 으로 인해, 재벌의 산업투자는 한국 국경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재벌의 축적이 민 족주의적 경제발전의 요구에 밀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또한 사회 민주주의적 형태와는 전혀 다르지만, 국민경제 내부에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자본과 노동 간 의 일정한 경제적 계급타협도 성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발전국가 모델은 국가-기업-은행의 협력체제의 동전의 이면에 고부채-고 투자 경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국가의 투자유도와 금융지원은 재벌이 국민 경제의 장기적 고려에 입각한 고투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도성장을 가져왔지만, 고부채-고투자 모델은 국민경제 전체 수준에서나 기업 수준에서나 외부 충격에 매 우 취약한 체질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자금 조달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세계시장 상 황이 악화되거나 하면 기업의 유동성 악화, 지급 불능, 파산 등으로 이어지기가 십 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비중 때문에 재벌 의 불안정과 위기는 곧 국민경제 전체의 불안정과 위기로 전파된다. 그 때문에 국 가에 의한 금융통제는 고투자-고성장의 기제인 동시에 국민경제의 안정화 기제이기 도 했다. 국가가 국내 금융뿐만 아니라, 기업 및 은행의 해외자금 조달과 운용에 대해 통제력을 갖는 것은 고부채-고투자 경제의 안정성과 국민경제의 자율성의 확 보를 위해 불가결한 장치였다(Wade and Veneroso, 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금융지원을 등에 업은 재벌의 성장지향적 고부채-과잉 투자 경향은 수차례에 걸쳐 부실기업 사태와 경제위기를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 재 벌 총수는 전체 투자자본의 극히 일부분만 갖고서도 상호출자와 차입경영을 통해 그 수십 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할 수가 있는 구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투자의 비 용과 위험에 대한 규율이 지극히 취약했다. 더군다나 국가는 기업 이해 당사자로서

노동을 배제시킨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소액 주주와 최대 채권자인 은행까지도 경영감시 역할에서 배제시켜, 재벌경영에 대한 내외적 감시가 지극히 취약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총수전제체제, 전기적 특권적 무책임 족벌지배체제가 조장, 방치되었던 것이다. 발전국가체제가 거시적 수준의 권위주의적 동원체제라면, 재벌경영은 그 쌍생아, 미시적 수준의 권위주의적 동원체제라 할 구조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기업의 명운이 달려 있는 중대한 투자결정이 총수의 무모한 고집과 결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실화된 경우 기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은행이 그 부담을 떠안거나 중앙은행의 최후의 대부자 역할에 의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 채권이 정리되었다. 국가기업-은행간에,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켜 손실과 위험을 사회화하는 이러한 관행은 기업과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더욱 심화시켰다.

국가-기업-은행 협력체제에 내재된 도덕적 해이와 더불어 발전국가 모델에 내재된 또 하나의 중요한 딜레마는 재벌에게 모니 체제를 낳는 자기 해체적 동학이다. 발전국가 모델은 분배면에서 노자간 타협구조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민경제 수준은 물론 기업 수준에서도 지극히 노동억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노동시장 제도를 분산형, 다원주의형, 양극화형, 협력주의형의 네 유형으로 나눌 때, 한국은 노동권이 가장 저발전된 분산형에 속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높다. 그러므로 한국 발전국가 모델만큼 극단적으로 대자본이 압축적으로 성장한 반면 노동 참여가 배제된 발전유형을 찾기는 어렵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기업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온 발전국가 접근에서는 간과해온 경향이 있었지만,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근본적 특징이자, 발전모델의 진보적 전환을 어렵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해야 한다. 1980년대 이후의 한국 경제발전체제 전환의 기본선은 노동부문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새로운 도전에도 불구하고 노동통제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발전국가 관리 재벌경제가 시장국가를 포획 종속시키는 재벌지배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이었는데, 이 신자유주의적 경로는 노동배제적 국가-재벌 지배 연합 주도라고 하는, 한국 발전주의 체제의 '발전 딜레마'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이병천, 1998).

### Ⅲ. 연성 시장국가와 무책임 정치관료체제

1980년대 이후 국정 담당자들의 한국경제 개혁노선은 개발연대의 국가관리 시장 경제에서 개방적 자유시장경제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 기본선은 재벌의 투자를 자유화하고 금융을 자유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질서에 국민경제를 개방하는 것이었다. 산업화시기 이후의 한국경제가 개방적 자유시장 경제로의 길로 나아가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물론 외부적 요인으로서는 세계경제 상황이 변화되었다는 것, 특히 미국의 개방 압력이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 절로 미루고 여기서는 한국의 국내적 대응방식을 살펴보자.

국가관리 발전주의 체제의 해체와 개방적 재벌주도 자유시장 체제로의 전환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여하튼 전환과정의 한국경제에 대해 우리가 갖는 기본관심은 이전의 국가관리 시장경제 시기 국민경제 통치기제(governance mechanism)가 해체되면서, 어떠한 새로운 통치기제가 성립되어 갔는가 하는 점에 있다. 그리고 특히 질서 전환기의 특징은 구통치기제는 해체되면서 신기제는 안정적으로 구축되지 못함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정이 격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혼란과 불안정이 어떻게 경제위기로 이어졌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개방적 자유시장경제는 그저 규제를 완화하기만 하면 간단히 구축되는 것은 아니었다. 개발연대의 재량에 의한 규제는 규칙에 의한 규제로 전환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경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상응하는 새로운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했고, 새 경기규칙에 대한 합의가 필요했던 것이다. 새 경기규칙의 내용 중 핵심사항은 경쟁 규칙과 소유권 규칙일 것이다. 경제위기 이전까지 1980, 90년대를 장식한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김영삼 정권은 경쟁규칙과 소유권 규칙을 비롯하여 어떠한 새로운 경기규칙을 만들었고, 그에 기반하여 어떤 조금씩 다른 시장경제 질서가 만들어져 갔는가? 이들 정권은 시장주의의 기본노선에서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개혁의 진행속도에서뿐 아니라, 경쟁정책, 노동부문의 도전에 대한 대응정책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색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지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제도적 능력이다. 자유시장경제는 국가주도에 의해 창출되어야 하는 역설을 안고 있는데, 이 때 정부가 기득권 계층의 압

력에 포획되지 않고, 민간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어서 새로운 경쟁질서와 소유권 제도를 창출하는 데 어떠한 지적 도덕적 정치적 리더십과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선 먼저 산업화의 성공의 결과로서 이미 시장경제와 민간자본이 성장하고 경제가 복잡해져서 종래의 국가주도 형태는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는 경제정책상의 동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그러나 문제는 국가관리 경제의 부정적 폐해에 대해 시장주의자들이 주도한 반성과 개혁이 무분별한 탈규제와 자유화와 개방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시장주의자들은 발전국가 모델의 부정적 유산을 한국 경제정책과 경제질서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 한국만큼 미국에서 훈련받은 경제학자(ATKE)의 수가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미국식 자유시장론을 순진하게 신봉한 미국지향적 경제관료들과 학자들의 경제자유화 논리가 198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방향을 주도했다. 셋째, 그렇지만 자유화의 결과는 신고전파 자유시장론자들이 기대한 시장경제와는 달랐다. 현실적 시장경제는 재벌주도 시장경제였다. 이것은 노동배제적인 권위주의 발전국가-재벌 연합의 구조가 내포하고 있는 발전 딜레마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의 품안에서 커서 이제 자기의 발로 서게 된 재벌은 국가규제라는 속박의 타파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투자결정,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 모든 면에서 자유화와 개방을 지향하는 재벌의 사적 이익과 국민적 이익 간에 증대되어 가는 갭을 축소시켜 새로운 민주적 발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경제와 기업 수준의 통치과정에서 노동의 참여와 감시, 협력이 불가결한 것이었다.<sup>4)</sup> 그렇지만 1987년을 전환점으로 하는 노동의 진출과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발전국가 자본주의의 개방적 재벌주도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의 기본선을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우리가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 지향을 단순히 자유방임적 시장주의였다고 파악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다. 1993년의 금융실명제 실시, 1994년의 재벌업종전문화정책 시행, 1996년 노사관계 개혁위원회를 통한 노동관계법 개정 시도, 1997년의 금융개혁위원회를 통한 금융개혁 시도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은 일정하게 질서 자유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sup>5)</sup> 만약 이러

4) 이에 대해서는 Evans(1995, pp. 227~250), Wade(1990, p. 344), 이병천(1997) 참조.



한 정책이 일관되게 실행되었더라면 현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차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시장질서 정책은 노동권에 의한 자본권의 제약에 비해서는 미약하기 짝이 없지만, 공정경쟁질서의 이름으로 일정하게 자본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강력한 실천의지와 정책의 일관성,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국민적 지지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부터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구조개혁 없는 경기부양정책으로 시작한 사실이 주목되어야 한다. 문민정부는 개별사안으로는 재벌에 무서운 존재로 비쳤으나, 기본정책상으로는 처음부터 재벌의 등에 업히는 정책으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경제 100일 계획'이 환란의 시발점이라고도 보아도 좋다고 본다(김홍기, 1999, pp. 424~431; 한국일보, 1999, pp. 167~178). 그리고 이로부터 세계화-탈규제 정책과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았다. 세계화-탈규제 정책은 삼성그룹의 자동차 진출과 현대그룹에 대한 금융제재 해제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관료기구 개편에서도 '공룡' 재경원을 탄생시켰다. 그리하여 기존의 기획원과 재무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위험한 재경원 독주체제, 일국 경제의 운명을 강경식-김인호의 독단적 판단과 독선에 내맡기는 폐쇄적이고 경직적인 무책임 관료조직체가 만들어진 것이다(김홍기, 1999, pp. 491~496; 한국일보, 1999, pp. 156~166). 또한 김영삼 정부는 한보철강 사태 등으로 대통령 가족이 부패사슬에 연루되고, 관료계층의 지대 추구 행위가 만연하게 되어 마침내 제도개혁의 정치적 도덕적 능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야 센(Sen, 1999)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위기를 '비민주적 통치방식에 내려진 징벌'이라고 진단한 바 있는데, 이 진단은 재벌에 포획된 무능하고 부패한, 그리하여 연성화된 문민 시장국가와 제도화된 무책임 정치 관료체제가 위기의 근원임을 정확히 포착한 통찰이라 할 수 있다.<sup>6)</sup>

5) 김상조(1998)는 이 점을 강조한다.

6) 제도화된 무책임성, 또는 조직화된 무책임성이라는 개념은 울리히 벡(Beck, 1993)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V. 금융 자유화: 개방 외채경제와 외환 금융위기

한국의 금융개방은 대외적으로는 헤게모니 쇠퇴를 만회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호랑이 등에 올라탄 미국의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 전략,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이에 순응, 편승한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정책이 만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레이건 정권은 광주 민주항쟁을 유혈진압한 전두환 정권의 등장을 지원한 다음, 1980년대 초 이래 한국을 지난날의 냉전의 동맹국에서 최우선적인 개방 표적국으로 삼았다(Bello, 1994, ch. 8). 그렇지만 금융개방 압력이 본격화된 것은 '제 2 차 냉전'이 끝나고 신데타트로 전환한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중요한 전환점은 1987년 2월 루브르 합의와 10월의 주식시장 붕괴('검은 월요일')다.

미국은 달러 방어를 위해 G-7과의 내외 금리격차를 확보함과 동시에 최무 대국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과 아시아 니즈 통화의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되어 원화 절상을 요구받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1995년까지만 해도 일본, 대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된 원화 절상은, 1995년 4월 G-7 협약으로 미국의 강한 달러요구에 부응하여 엔이 강세에서 약세로 돌아서자, 이는 나라 경제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핵심 경제변수가 되었다.

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은 1990년대에 들어와 한미금융정책회의(Financial Policy Talks)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는 미국이 클린턴 집권 이후 이전까지 주로 일본을 상대로 가해오던 개방공세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했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전 한국은 1992년 1월 외국인이 한국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어서 1992년 3월과 6월, 그리고 1993년 6월에 걸쳐 3단계 금융자유화 및 개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제 1 단계가 1993년, 제 2 단계가 1994~95년, 제 3 단계가 1996~97년에 자유화와 개방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다(윤원배, 1996, p. 181). 미국은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OECD 가입이라는 미끼를 내걸었는데, 김영삼 정부는 이 미끼를 물어 무모하고 조급하게 금융시장을 개방하였던 것이다.<sup>7)</sup>

그런데 한국의 외환위기는, 동남아 위기의 '전염 효과'에 의해 크게 영향받았음은

7) 미국의 대한 개방전략을 자세히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하라. "Global Contagion", *New York Times*, February 16, 1999.

분명하지만, 태국과 같이 투기자본의 공격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다. 한국 위기 모델은 투기모델이 아니라 외채모델이라는 데서 그 특징을 찾아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소유 한도는 20%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고, 채권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또한 외환제도도 복수통화바스켓 방식에서 변동환율제로 변화되긴 했지만, 자유변동환율제가 아닌 관리변동환율제로서 1일 변동폭은 2.25% (이후 2.5%, 10%로 확대)로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 외환시장에서 외국자본의 투기 여지는 기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외환위기는 기본적으로 외채위기였고, 이는 금융기관이 단기외채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빚어진 위기였다. 그러므로 경제위기와 관련된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의 문제점은 주식시장, 외환시장 자유화쪽보다는 단기외자 도입 자유화 정책에 있었다.

한국이 도입한 외자의 대종은 단기자본이었고, 여기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 1990~93년간 52.3억 달러에 그친 자본수지가 1994~96년에는 174.2억 달러로, 3배 이상 증대하였다. 단기외채의 비중은 1990~93년중의 37%에서 1994~96년중에는 62% 수준으로 약 2배 증대하였다. 1997년 6월말 현재 단기 외채비중은 67%,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300%에 달하였다. 이것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단기자본의 유입은 외국투자거나 한국 금융기관 및 기업 모두에 강력한 유인을 제공했음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단기외자 이자율은 약 3%대로 이는 장기외자 이자율 약 6%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고, 또 국내 이자율이 국제금융시장 이자율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자본 도입의 감시 감독이야말로 경제위기를 앞둔 한국경제 위기관리 정책의 최중요 사안에 속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세계화정책은 어떤 형태의 정부 개입도 비생산적,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시장만능주의적 이데올로기를 득세하게 만들었고, 자본 유출입과 관련된 안정화 기제의 구축은 고려 밖에 있었다(유철규, 1998). 구체적으로는 외국환 은행의 중장기 차입에 대한 한도 배정제를 운용하여 중장기 외화 자금 차입을 제한하였고, 한도 배정제를 폐지한 후에도 사전 신고제를 운용하여 여전히 중장기 차입을 억제시켰다. 또한 금융기관의 중장기 용자재원 조달 비율을 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 대해서는 의무비율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는 정책적으로 아무런 규제 감독체제 없이 단기자본 도입을 조장한 것인데, 특히 종금사의 경우에는 은행과 달리 BIS 비

〈표 1〉 차입주체별 대외지불 부담 구성

(단위: 억달러, %)

차입주체	1996년말		1997년말		A-B
	금액 (A)	구성비	금액 (B)	구성비	
은행권	1,078	68.5	839	54.3	-239
국내은행	641	40.7	346	22.4	-295
개발기관	277	17.6	304	19.7	27
외은지점	160	10.2	189	12.2	29
종금권	109	7.0	88	5.7	-21
기타금융권	8	0.5	14	1.0	6
금융기관계	1,195	76.0	941	60.9	-254
국내기업	356	22.6	423	27.4	67
공공부문	24	1.4	180	11.7	156
대외지불계	1,575	100.0	1,544	100.0	-31

자료: 민주개혁국민연합(1999, p. 258).

〈표 2〉 단기외채 비율의 국별 비교 (1997년 6월말 현재)

(단위: %)

국 명	단기외채/총외채	단기외채/외환보유액
한국	67	300
인도네시아	24	160
말레이시아	39	55
필리핀	19	66
태국	46	107
아르헨티나	23	108
브라질	23	69
칠레	25	44
콜롬비아	19	57
멕시코	16	126

자료: BIS, IMF, World Bank, 최창규(1998, p. 140)에서 재인용.

〈표 3〉 환율, 국제수지, 국민소득

	1993	1994	1995	1996
환율(연평균, 원)	802.6	803.8	771.3	804.5
경상수지적자(억달러)	4	-45	-88	-237
1인당 소득(달러)	7,484	8,467	10,037	10,543

을 제한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한정 단기 차입을 도입할 수 있었다(강철준, 1998, pp. 96~99; 민주개혁국민연합, 1999, pp. 81~85, 241~259). IMF도 '한국경제의 기초여건은 튼튼하다'고 바람을 넣었고 미국 신용평가기관 또한 한국에 대해 AA 등급을 부여했다. 그리하여 사적 수준에서 외국투자자와 국내차입자 간의 합리적 행동과 상호 이익 합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수준에서 국민경제의 거시적 취약성과 불안정성은 극도로 높아졌다.

외환 금융위기의 발발에서 제2 금융권, 그 중에서도 특히 종합금융사가 정부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실이 중요하다. 정부는 비록 약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은행에 대한 통제는 지속한 반면, 제2 금융권에 대해서는 진입제한도 대폭 완화했고, 금리 및 자산운용에서도 은행부문보다 훨씬 자유로운 영업환경을 제공했다(장광수, 1997). 그리하여 금융산업구조에서 은행권에 비해 제2 금융권이 과잉비대해진 상황이 초래되었다. 악성 부채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도 은행이 아니라 종금사였다. 이들은 발전국가 모델의 구성요소라기보다는 자유시장자본주의의 구성요소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제2 금융권은 단기운영자금의 중개 역할을 전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잉팽창하여 상호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재벌의 자금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재벌들은 소유제한이 없으면서 진입장벽이 있는 제2 금융권에 집중적으로 진출하여 이를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했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9개 지방 투금사를, 1996년 7월에는 나머지 15개 투금사를 업무능력과 관계없이 모두 종금사로 전환시킨 바 있는데, 이들은 국제금융에 미숙한데도 불구하고 국제업무를 허가받아 단기외화를 차입하여 국내 재벌들에게 장기로 대부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고수익을 위해 동남아와 러시아 등지에 고위험 채권을 중심으로 곡예식 자산운용까지 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금사의 이러한 위험경영은 완전히 무감독상태로 방치되었다. 제2 금융권의 인가와 자금 조달 및 운용 모두가 불안정과 위협으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 감독 기능은 마비상태에 있었다. 이는 국민경제 안정화 기제가 금융개방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붕괴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율 문제는 단기자본 관리문제와 더불어 외환 금융위기 발발의 핵심 요인이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화의 절상은 미국의 쌍둥이 적자해결을 위한 외압에 그 외부적 원인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한국이 환율정책에서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할 수 없는 주변국의 처지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는 원화 절상 현상의

반쪽 이유이며, 다른 반쪽으로는 김영삼 정부의 의도적인 원화 절상 정책이 있다. 어느 나라든지 그런 것이지만, 통화 고평가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인기를 끄는 데는 매우 매력적인 정책이다. 왜냐하면 고평가는 수입물가를 싸게 해서 물가안정을 도와주고, 기초여건 개선과 관계없이 현재 소비를 증대시켜 주기 때문이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93년 7,484달러에 불과하던 수준에서 1995년에는 일약 1만 37달러 수준으로 높아졌는데, 김영삼 정부는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신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온갖 노력을 소비했다. 놀라운 것은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 운명의 분기점이 되었다고 지적되는 1995년 4월 엔 약세 기조로의 전환 이후에도 원화 고평가 정책이 계속되었다는 사실이다. 고평가된 원화는 해외여행을 즐기게 된 국민들에게도 서서히 마약이 되어 갔지만, 그것은 재벌들의 엄청난 과잉증복투자의 환율적 조건이기도 했다(정규재·김성택, 1998, pp. 358~361).

원화 고평가 정책은 국제경쟁력, 특히 대일경쟁력의 심대한 악화와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대기업 연쇄도산에 이은 한국의 국제신인도 추락의 배후에는 바로 이 현상이 존재했다. 1993년의 원 달러 환율은 803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95년 경상수지 적자가 거의 90억달러인데도 불구하고 환율은 771원으로 크게 절상되었다. 경상수지 적자가 237억 달러로 급증한 1996년 환율은 805원으로 1994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표 3〉 참조). 환율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셈이다(민중개혁국민연합, 1999, pp. 60~68, 211~220; 한국일보, 1999, pp. 294~299). 일반적으로 개방 외채 경제에는 자본 유입을 반영하는 고회환율과 그에 따른 국제수지 적자의 양립이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위기동학이 작동하고, 미국조차도 여기에 예외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경우는 무리하고 비정상적인 고평가 정책 때문에 이 위기동학은 격화되었다.

## V. 재벌지배 체제:

### 무책임 특권 자본주의와 고부채-확장주의 경영의 실패

한국의 경제위기는 외환 금융위기에 실물부문의 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제 실물부문의 위기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하자.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재벌체제는 기업통치구조에서 외부감시나 내부감시 모두가 지극히 취약

한, 특권적인 무책임 총수전제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고부채-확장주의-과잉투자 경향에 따른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 사태와 경제위기가 초래되면, 이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떠안아 손실과 위험을 사회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수습되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 시기에도 재벌의 고부채-확장과잉투자 경향은 여전히 유지, 온존되었고, 특권적 무책임 총수전제 체제에도 발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재벌 총수는 여전히 전체 투자자본의 극히 일부분만 갖고서도 상호 출자와 차입경영을 통해 그 수십 배가 넘는 자산을 지배할 수 있었다(김기원, 1999; 송민경, 1998). 김영삼 정부의 집권 초부터의 경기 확장정책, 세계화정책, 단기외채 도입 극대화 정책은 재벌의 무책임 체제와 고부채-과잉투자 경향을 조장하였다. 원화 절상 정책은 재벌들이 싼 달러로 엄청난 과잉 중복투자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이 경향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김영삼 정부는 집권 초기 구상에서는 제법 강력한 재벌규율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정경쟁정책은 기업분할 명령제 및 투자회수 명령제, 재벌의 금융업 및 언론방송업 진출 제한, 재벌의 은행부채를 출자로 전환하여 대출금을 주식으로 상계처리하는 방안, 금융기관의 재벌 기업주식의 보유 확대, 소유 분산 및 소유와 경영의 분리 촉진 등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이 구상은 최종 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계열사 출자 축소, 상호 채무보증 규모 축소 등으로 소유 분산과 경쟁력 집중 억제책을 추진하는 방침으로 변모되었다. 실제 실적을 30대 재벌에 대해서 보면, 주식소유의 경우 가족 소유분은 약간 축소되었으나(1993년 10.3%에서 1997년 8.5%), 내부 지분율은 별 변함이 없다(1993년 43.4%에서 1997년 43.0%). 이에 비해 채무보증 제한은 상당히 개선된 셈이다(1993년 165.5조 원에서 1997년 64.4조 원, 자기자본 대비는 같은 기간 469.8%에서 91.3%). 그러나 이것도 개별 기업별로 보면 자기자본 대비 100%를 초과하는 재벌이 30대 재벌 중 16, 200% 초과한 기업은 9개 재벌이나 된다. 극단적으로 한라 그룹은 891%였다(박승룡, 1997, pp. 23~24, 121~122, 130~133).

산업정책 면에서 김영삼 정부는 기업과 국민경제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재벌의 과도한 다각화에 있다고 보고 업종전문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개별기업을 중심으로 했던 노태우 정부 시기의 주력업체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그룹별로 자율적으로 전문업종을 선정하여 전문대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 정책이었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여신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 자구노력

의무 면제, 출자총액 제한 완화, 채무보증한도 규제예외 인정 등을 유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벌구조개혁과 경제력 집중 완화의 기본 정책수단이었던 여신관리제도를 형해화시켰다. 바로 이 점에서 주력업종제도는 주력업체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계승한 것이며, 문민정부의 재벌정책 후퇴를 집약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다. 업종전문화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 대한 규제만을 완화시켜 준 셈이었다(주대환, 1995, pp. 50~62). 이 제도는 재벌들이 주로 대규모투자가 필요한 업종들을 주력업종으로 선정하고, 또 주력기업의 대출금을 타계열기업으로 전용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주력기업은 재벌그룹의 자금조달 창구역을 하게 되었다. 업종전문화는커녕,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과도한 차입경영을 조장하며, 과잉 중복투자를 방치하는 실패작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업종전문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재벌들이 이 정도의 규제마저도 달가워하지 않자, 1994년 1월에는 11~30대 재벌에 대해 기업 투자와 부동산 취득시에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였고, 그것에 이어 1995년 4월에는 10대 재벌에 대해서도 이를 폐지하였다. 논란을 거듭해 온 삼성의 자동차산업 신규 진입이 허용된 것도 이보다 조금 전인 1994년 12월이었고, 또 1995년 1월에는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규제가 폐지되었다. 이같은 산업정책면에서의 규제완화도 1994년 11월 구상된 세계화 정책이 전환점이 되었다(동아일보, 1998. 3. 27). 공식적으로는 업종전문화 정책은 1997년 1월 전면 폐기되었다.

시장만능주의 이데올로기의 득세, 재벌의 저항에 대한 후퇴, 부정부패의 심화와 정실 자본주의로의 퇴행 등, 김영삼 정부의 무능과 정책 실패로 인하여, 재벌의 고부채-과잉중복투자 경영의 병폐, 수익성과 안정성을 무시하면서 과도한 차입으로 총수의 독단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 무분별하게 설비투자를 확장하는 경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제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룹 총수는 출자와 채무보증에 의해 개인 투자액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하면서도 그에 응당한 법적 책임은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 엄청난 오랜 도덕적 해이가 조장되고, 방치되었던 것이다. 삼성, 현대, LG는 반도체부문에 연간 수조 원대의 천문학적 투자를 거듭했고, 한보 또한 집권여당 수뇌부를 등에 업고 5조 원대의 어마어마한 돈을 차입해 제철소를 세웠다. 기아와 삼미도 특수강 부문에 각각 1조 원 이상을 부어넣었다. 시장만능주의와 부정부패가 함께 도와서 삼성의 자동차 진출이 허용되자, 쌍용 기아 등 자동차업체도, 삼성이 1998년 본격 생산을 시작하기 전에 생산라인을 확장하는 데 기업



의 사활을 걸었다. 석유 화학 등 여타 부문에도 경쟁적 과잉투자 행진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화학부문에 막대한 시설과잉 상황이 초래되었다.

재벌의 무분별한 설비투자 확장은 재무구조면에서는 차입의존도의 심화, 단기차입 비중이 높아진 차입구조의 악화, 수익성의 악화를 동반하면서 진행되었다.<sup>8)</sup> 특히 자금조달 구조에서 기업 어음 CP와 해외 차입의 비중이 급증한 것이 새로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이는 재벌의 무분별한 고투자 행진이 국내외 금융시장 양면으로부터의 높은 단기차입에 의존함으로써 심각한 만기구조의 불일치 문제를 안고 있

〈표 4〉 채무보증 규제 정책

연 도	내 용
1992.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최초로 계열사간 채무보증 축소 추진
1993. 4. 1	채무보증 한도액을 자기자본 200%로 제한
1996. 5. 3	〈공정위 중점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통해 채무보증의 단계적 완전해소 방안 발표
1997	공정거래법 개정시 1998년 3월 말까지 자기자본의 100%로 채무보증을 축소하도록 개정하고, 완전한 해소 일정은 차기 법개정에서 제시

〈표 5〉 산업정책과 업종전문화 정책 추이

연 도	내 용
1985.	공업발전법과 투자자유화 원칙
1989.	합리화 업종 시한 만료
1993. 4. 16	〈신경제 5개년계획 작성지침〉 발표. 업종전문화 및 소유분산, 기업분할명령제, 투자 회수명령제, 재벌의 금융기관 및 언론사 진출 제한 등 포함
1993. 10	주력업종제도로 업종전문화 추진
1994. 1.	재벌에 대한 여신관리 규제 완화
1994. 12	삼성그룹 자동차산업 진입 허용
1995. 1.	석유화학산업 설비투자 규제 폐지
1995. 4. 6	거액여신총액한도제와 10대 재벌 계열기업 투자규제 폐지
1997. 1. 29	업종전문화 정책 공식 폐기

8)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김동원(1998) 참조.

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계열사간 높은 채무보증 비율은 상생의 관계가 아니라 상극의 관계, 즉 한 계열기업의 부실이 재벌 전체의 부실로 파급되는 관계로 전환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재벌경영은 금융부문이 불안정해지거나 신용이 경색되면 대량 부실과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기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1996년 초부터 반도체 가격이 대폭락하기 시작하면서 경기침체와 대기업의 도산이 줄을 잇게 되었다. “폭주하는 기관차”(마빈, 1998, p. 33)와 같은 재벌의 고부채-고투자 부실경영의 극도의 취약성이 수출경쟁력 악화, 금융부문의 취약성과 결합된 상황에서,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의 폭락에 의해 촉발되었던 아시아 전체에 걸친 금융위기가 원화 환율을 폭락시키고, 일본에 의한 약 80억 달러의 단기자본 철수를 시작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이 단기외자의 만기연장을 중단하고 원리금 상환을 요구함으로써, 한국경제는 외환 금융위기에 실물부문의 고부채-과잉투자 위기가 결합된 복합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sup>9)</sup>

그렇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으로부터 곧바로 IMF 관리체제가 불가피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아시아 통화기금안이 봉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한국을 자본세계화의 함정에 빠뜨려 위기 발발에 한 몫을 한 미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통화기금안을 철저히 봉쇄함으로써 구제금융 지원의 교섭창구를 IMF가 독점하게 했다. 이로써 미국이 IMF를 통해 패권주의적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IMF는 미국의 국익과 한국에 돈을 빌려준 미국 채권은행의 이익을 대변했다. 아시아 통화기금안이 봉쇄되고, 미국이 가동한 IMF 구제금융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구도에 바로 냉전시대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미국 일극주의 동아시아 지역체제의 약체성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VI. 맺음말

한국경제의 위기는, 종래 ‘동아시아 기적’론에서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해 온 ‘수정주의’ 해석, 즉 국가중심적 접근에서 주장한 것처럼, 국가의 과잉규제가 아니라 그 반대인 과소규제 또는 탈규제, 즉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와 그것에 편승한

9) 자세한 경과는 최창규(1998) 참조.

한국의 무모한 금융 자유화의 악조합에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국내적으로 구발전국가 체제는 심각한 구조적, 제도적 왜곡의 유산을 물려주었고, 그리하여 국가주의 구체제의 유산 위에 시장주의 신체제의 모순이 중첩된 무책임 정치경제체제가 위기의 모태가 되었다. 위기는 시장규율의 부족에 내려진 징벌이 아니라, '비민주적 통치방식에 내려진 징벌'이라고 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가는 개발연대를 주도한 강한 국가였으나, 미국 헤게모니의 경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는 '약한 국가', '반주권국가'였다. 이 때문에, 미국이 냉전시대 한국경제 발전을 지원하던 발전안보주의 전략에서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으로 노선을 변경하자 한국의 국가권력은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그것에 부응, 순응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연성 시장국가로 전환했다. 그리고 냉전시대 동아시아는 수평적인 지역협력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미국을 정점으로 수직적으로 연결되는 발전안보연합의 틀이 구축되었는데, 이같은 냉전의 유산이 위기 발발과 그에 이은 수습방식까지 지배했다.

#### ■ 參考文獻

1. 강철준, "외환위기와 정부정책 실패요인 분석", 『한국의 금융 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1998.
2. 김기원,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 경영체제의 구축", 『한국재벌개혁론』, 나남, 1999.
3. 김균·이병천 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4. 김동원, "한국경제 위기의 원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5. 김상조, "김영삼정부의 개혁실패와 경제위기",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6. 김흥기 편, 『영국의 한국경제: 비사 경제기획원 33년』, 매일경제신문사, 1999.
7. 동아일보, 『비화 문민정부』, 1998.
8. 민주개혁국민연합, 『한국경제 위기의 배경과 진상』, 경제청문회 국민감시단 백서, 풀빛, 1999.
9. 박승룡, "재벌의 구조개편에 관한 법적 연구: 재벌총수의 지배력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7.
10. 송민경, "국가주도적 성장체제와 재벌, 경제위기",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11. 스티브, 마빈, 『한국에 제2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회평론, 1998.
12. 신용하 외, 『IMF 체제의 사회과학적 진단』,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13. 유철규, "금융자유화와 외환위기, 그리고 IMF 금융개혁",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14. 윤원배, "금융자유화와 금융감독", 『경제발전연구』, 2, 1996.

15. 이병천, “한국의 경제발전과 발전국가론”, 『산업과 경제』, 제7권 제2호, 강원대 산업경제연구소, 1997.
16. —,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딜레마”,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1998.
17. —, “위기와 대전환: 신자유주의 보수혁명과 한국민주주의의 전망”, 『당대비평』, 7, 1999.
18. 이병천·백영현, 『한국사회에 주는 충고』, 삼인, 1998.
19. 이종욱 외, 『한국의 금융외환위기와 IMF』, 경문사, 1998.
20. 장광수, “은행 및 제2 금융권간 비대칭적 규제의 추이와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금융연구』, 제90호, 1997.
21. 정규재·김성택,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한국경제신문사, 1998.
22. 정운찬, “한국 자본주의의 전환을 위한 제안”, 『당대비평』, 5, 1998.
23. 주대환, 『자랑스런 나라는 정직한 사람이 만든다』, 우정미디어, 1995.
24. 참여연대, “국회 경제청문회 10가지 핵심사안”, 『신동아』, 1998년 2월.
25. 최창규, “투기적 공격이론과 한국의 외환위기”, 『경제분석』, 제4권 제2호, 한국은행 조사부, 1998.
26. 한국은행 조사부, 『한국의 금융자유화와 금융위기』, 조사연구자료 99-3, 1999.
27. 한국일보 특별취재팀, 『대통령과 아들: 실록 청와대 문민정부 5년』, 한국문원, 1999.
28. Amsden, A. H.,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29. Beck, U., *Die Erfindung des Politischen*,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1993, 문순홍 역, 『정치와 재발견』, 거름, 1998.
30. Bello, W., *A Dark Victory*, Food Institute, 1994, 이윤경 역, 『어두운 승리』, 삼인, 1998.
31. Cumings, B., “The Korean Crisis and the End of Late Development”, *New Left Review*, 231, 1998.
32. —, *Parallax Visions: Making Sense of American-East Asian Relations at the End of the Century*, Duke University Press, 1999.
33. Evans, P., *Embedded Autonomy: State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34. —, “The Eclipse of the State: Reflections on Stateness in an Era of Globalization”, *World Politics*, 50, October 1997.
35. Johnson, C., “Economic Crisis in East Asia: The Clash of Capitalism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2, 1998.
36. Park, Young Cheol,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Opening in East Asia: Issues and Policy Challenges*, Korea Institute of Finance, 1998.
37. Sen, A., *Democracy and Social Justic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mocracy, Market Economy and Development, Seoul, February 27, 1998.
38. Wade, R., *Governing the Market: Economic Theory and the Role of Government in East Asian Industrializ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39. Wade, R. and F. Veneroso, “The Asian Crisis: The High Debt Model versus the Wall Street-Treasury-IMF Complex”, *New Left Review*, 228, 1998.